

제8차 유럽의회 선거결과와 향후 전망

강유덕 구미·유라시아실 유럽팀 연구위원 (ydkang@kiep.go.kr, Tel: 3460-1123)

차 례 ● ● ●

1. 제8차 유럽의회 선거결과
2. 선거결과 분석
3. 후속이슈 및 향후 전망
4. EU 경제정책에 대한 영향

주요 내용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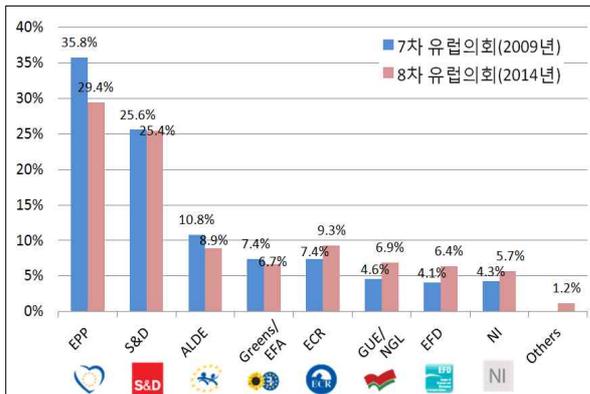
- ▶ 제8차 유럽의회 선거(5월 22~25일 실시)에서는 중도우파가 득표율 감소에도 불구하고, 제1당 지위를 유지하였으며, 과거에 비해 극우 또는 유럽회의주의 정당이 약진하는 현상이 나타남.
 - 극우파인 프랑스의 국민전선(FN)과 EU 탈퇴를 주장하는 영국의 독립당(UKIP)은 자국의회에서는 소수정당에 불과하나, 국내정치의 양당체제를 허물어뜨리며 1위의 득표율을 기록함.
 - 덴마크에서도 극우정당이 집권당을 제치고 1위 득표율을 기록하였으며, 핀란드와 독일의 극우정당도 소수이지만 의석확보에 성공함.
 - 그리스에서는 간축정책에 따른 피로감이 누적되면서 급진좌파인 시리자(Syriza)가 1위의 득표율을 기록하였으며, 극우파 또한 3위의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극좌와 극우가 동시에 득세하는 현상이 발생함.
- ▶ 유럽회의주의 정당의 득세는 EU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확산되어온 점과 범EU 차원에서 나타나고 있는 경기침체, 고실업 현상에 기인하는 바가 큼.
 - 장기간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고실업, EU의 권한확대와 범EU 차원의 간축조치는 유럽회의주의 정서를 기반으로 극우와 극좌가 동시에 부상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해 주고 있음.
 - 그동안 유럽의회 선거가 집권당에 대한 중간평가로서의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프랑스, 영국 등에서는 국내 정치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회원국의 EU 관련 입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음.
- ▶ 유럽회의주의 정당이 약진함에 따라 유로존 위기해결을 위해 도입 중인 주요정책들의 추진동력이 다소 약화될 가능성이 있음.
 - 여전히 중도성향의 정당이 과반수를 크게 상회하는 의석을 확보하고 있고, 결속력이 낮은 유럽회의주의 정당의 특징상 이번 선거결과가 EU의 정책방향에 대변혁을 가져올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 그러나 경우에 따라 유럽회의주의 정당들이 결정투표자(casting voter)로서 레버리지를 확보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며, 은행동맹 및 금융규제, 역내노동 이동, TTIP(미·EU FTA) 관련 법안이 그 대상이 될 수도 있음.
 - 유로존 위기 이후 EU는 통합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해온 바, EU에 대한 지지도 약화는 개혁의 지속적인 추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함.

1. 제8차 유럽의회 선거결과

■ 제8차 유럽의회 선거(5월 22~25일 실시)에서는 중도우파가 득표율 감소에도 불구하고, 제당 지위를 유지하였으며, 과거에 비해 유럽회의주의(Eurosceptic) 정당이 약진하는 현상이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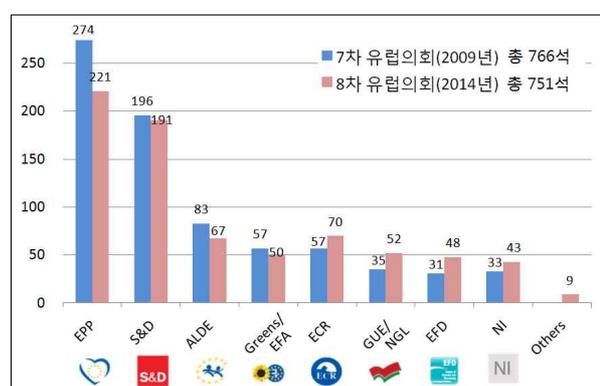
- 총 751석 중 유럽국민당(EPP, 중도우파)이 221석으로 제1당의 위치를 유지하였으며, 사민당(S&D, 중도좌파)이 191석으로 2위 위치를 고수하였으나, 과거 4~5위에 불과했던 보수개혁당(ECR)이 크게 약진하면서 제3당으로 부상함.
- EPP는 29.4%의 득표율을 기록하여 제1당 위치를 유지하였으나, 제7차 의회선거(2009년)에 비해 득표율(△6.4% 포인트)과 의석수(△53)가 크게 감소하였으며, S&D의 경우 과거 수준의 득표율과 의석을 유지함.
- 유럽회의주의 성향의 ECR은 과거 7% 수준의 득표율과 50여명의 의원 수로 비교적 작은 정당이었으나, 이번 선거에서는 9.32%의 득표율을 기록, 70석의 의석을 차지하면서 제3당의 위치를 차지함.
- 반면에 중도/자유주의를 표방하는 유럽자유민주연대(ALDE)는 과거 10~12%의 득표율에서 8.92%로 득표율 하락을 기록하면서 지난 10년간 유지해온 제3당의 지위를 상실하고 4위를 기록함.

그림 1. 정당별 유럽의회 선거 득표율 변화



주: 정당의 정확한 명칭 및 성향은 [표 2]를 참고.
자료: European Parliament, <http://www.results-elections2014.eu>

그림 2. 정당별 의석 수 변화



주: 정당의 정확한 명칭 및 성향은 [표 2]를 참고.
자료: European Parliament, <http://www.results-elections2014.eu>

■ 이번 선거에서는 프랑스, 영국 등 주요국가에서 국내정치의 양당체제를 허물고 극우 또는 유럽회의주의 성향의 정당이 득세한 것이 특징이며, 그 외의 국가에서도 극우파가 약진하거나, 극좌파가 선전하는 양상을 보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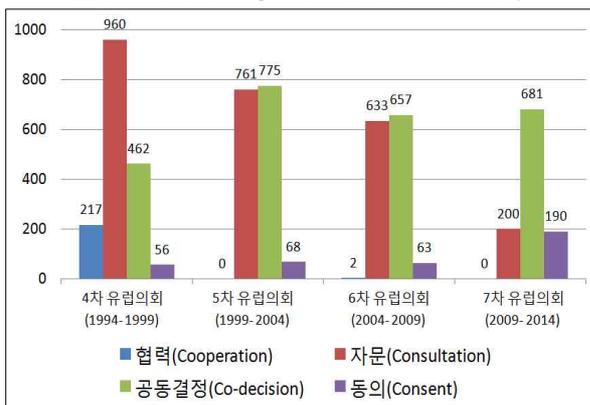
- 프랑스의 국민전선(FN: Front National)과 영국의 독립당(UKIP)은 자국의회의에서는 소수정당에 불과하나, 국내정치의 양당체제를 허물어뜨리며 1위의 득표율을 기록하였으며, 그리스에서는 급진좌파성향의 시리자(Syriza)가 가장 높은 득표율을 획득하는 데 성공하였음.
- 그 결과 우파인 자유유럽-민주그룹(EFD)과 유럽통합좌파/북극색좌파 그룹(GUE/NGL)의 득표율과 의원 수가 과거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양 정당은 이념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유럽회의주의 성향을 보이는 공통점이 있음.

- 유럽회의주의 성향의 정당이 약진하는 현상은 그리스와 같은 구제금융국 외에도 덴마크, 핀란드, 폴란드 등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공통적으로 나타났음.

■ 이번 선거에서는 유럽의회의 권한이 점차 강해지는 추세 속에서 범유럽 차원의 이슈들이 많이 주목을 받았으나, 투표율 자체는 과거에 비해 높지 않았음.

- 리스본 조약(2009년 발효)은 다양한 정책영역에서 유럽의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시켜, 유럽의회가 EU 및 회원국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임.
 - 리스본 조약은 EU 운영의 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해 유럽의회의 공동결정절차)가 적용되는 범위를 현저하게 증가시켜 거의 대부분의 정책영역에서 유럽의회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도록 하였음.
 - 현재 유럽의회가 참여하는 전체 입법절차 중 64%가 공동결정절차를 통해 결정되며, 유럽의회의 동의(consent)를 필요로 하는 입법까지 포함할 경우 전체 입법의 81.3%가 유럽의회의 실질적인 승인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짐 (그림 3, 4).
- 반면에 유럽의회 선거에 대한 EU 시민의 투표율은 지속적으로 하락추세이며, 이번 선거에서는 2009년 (7차 유럽의회 선거)과 유사한 43.09%를 기록함.
 - 유럽의회는 본래 입법이 아닌, EU 집행위원회를 견제하기 위한 기구이므로 중도성향 유권자들의 정치적 관심도가 떨어지며, 非정치화로 인해 언론매체와 회원국 국회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한편, 이로 인해 선거 시 낮은 투표율을 기록하여 왔음(그림 4).
 - 또한 비례대표제의 특징상 소수파인 극우-극좌성향, 반EU 정당이 국내선거에 비해 득세하는 경우가 많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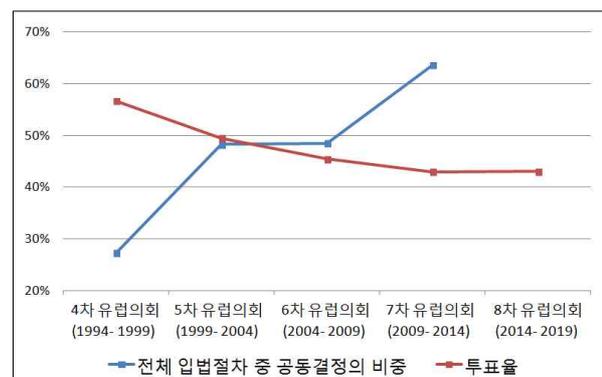
그림 3. 입법절차 방식에 따른 유럽의회의 활동



주: 공동결정 절차는 EU 이사회와 유럽의회가 공동으로 법안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공동결정을 통한 입법의 수가 증가할수록 유럽의회의 권한이 강화되고 있음을 의미함.

자료: 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 At a glance 08/05/2014.

그림 4. 유럽의회의 권한 변화와 선거 투표율



주: 전체 입법절차 중 공동결정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은 유럽의회의 권한이 강화되고 있음을 의미함.

자료: 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 At a glance 08/05/2014.

- 1) 공동결정(Co-decision)절차는 EU의 정책결정과정에서 EU 이사회와 유럽의회가 공동으로 결정하는 경우를 뜻하며, 유럽의회는 법안에 대해 실질적인 거부권을 갖게 됨. 리스본 조약에 의거하여 동 절차의 공식적인 명칭은 일반입법절차(OLP: Ordinary Legislative Procedure)로 명명되었음.

- 과거에는 국가별 선거운동 과정에서 각 정당이 범유럽적 이슈보다는 국내 이슈를 전면에 내세우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유럽의회 선거에서는 반EU 성향의 이슈이기는 하나 범유럽 차원의 이슈가 등장하는 모습을 보였음.
- 유럽의회 선거는 사실상 각국에서 현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로 인해 오히려 국내 이슈가 부각되는 경우가 많았음.
-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는 각 유럽정당들이 비교적 상세한 manifesto를 발표하였고, EU 운영에 대한 불만을 표출함으로써 범유럽 차원의 의제가 활발하게 논의되었음.

글상자 1. 유럽의회 선거방식과 의정활동

- 유럽의회는 1979년 이래 직접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유일한 EU 기관으로 인구 수에 기초하여 국가별 의원 수가 할당되며, 비례대표제 형식으로 선출됨.
-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회원국 자체가 하나의 대선거구가 되나, 지방자치의 전통이 강하거나 연방국가인 5개국(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벨기에)은 자국을 여러 개의 지역구로 분리하여 지역구 내에서 비례대표제를 실시함.

표 1. 유럽의회 내 국가별 의석 수

국가	의석 수	비중	국가	의석 수	비중	국가	의석 수	비중	국가	의석 수	비중
독일	96	12.8%	네덜란드	26	3.5%	오스트리아	18	2.4%	크로아티아	11	1.5%
프랑스	74	9.9%	벨기에	21	2.8%	불가리아	17	2.3%	라트비아	8	1.1%
이탈리아	73	9.7%	그리스	21	2.8%	덴마크	13	1.7%	슬로베니아	8	1.1%
영국	73	9.7%	헝가리	21	2.8%	핀란드	13	1.7%	키프로스	6	0.8%
스페인	54	7.2%	포르투갈	21	2.8%	슬로바키아	13	1.7%	에스토니아	6	0.8%
폴란드	51	6.8%	체코	21	2.8%	아일랜드	11	1.5%	룩셈부르크	6	0.8%
루마니아	32	4.3%	스웨덴	20	2.7%	리투아니아	11	1.5%	몰타	6	0.8%

자료: European Parliament.

- 의석획득을 위한 최소 득표비율(threshold)은 5% 이내여야 함.
 - ※ 5%: 프랑스, 리투아니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체코, 루마니아, 헝가리, 4%: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웨덴, 3%: 그리스, 1.8%: 키프로스.
- 선거일은 일반적으로 4일 정도가 부여되며, 국가별로 사정에 맞게 1~2일을 선택하여 선거를 실시
 - ※ 제8차 유럽의회선거 일시: 네덜란드, 영국(이상 5월 22일), 체코, 아일랜드(이상 5월 23일), 키프로스, 체코(둘째 날), 프랑스(해외령), 이탈리아, 라트비아, 몰타, 슬로바키아(이상 5월 24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독일, 에스토니아, 그리스, 스페인, 핀란드, 프랑스, 이탈리아(둘째 날),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스웨덴, 슬로베니아(이상 5월 25일)
- EU 기능조약(TFEU) 22조 2항은 EU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EU 회원국의 국적이 아니더라도, 거주지에서 유럽의회 선거를 위해 투표를 하거나,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 단 투표권 부여를 위한 거주자 자격요건 및 입후보 요건은 국가별로 다소 상이
- 유럽의회에 진출한 각국 의원들은 국적에 상관없이 정치적 성향에 따라 원내 정치그룹을 형성하며, 이 그룹(일명 European Political Group)을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게 됨.
- 정치그룹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최소 7개 회원국 출신의 25명 이상의 의원이 필요함.²⁾

표 2. 유럽의회의 정치그룹

정당 명		성격 및 대표 소속정당	국가별 소속정당
EPP	유럽국민당(European People's Party)	기독교민주주의(중도우파)	독일 기민당(CDU), 프랑스 대중운동연맹(UMP)
S&D	사민당(Progressive Alliance of Socialists and Democrats), 舊유럽사회당(Party of European Socialists)	사민주의(중도좌파)	독일 사민당(SDP), 프랑스 사회당(PS), 영국 노동당(Labour)
ALDE	유럽자유민주연대(Alliance of Liberals and Democrats for Europe)	중도파, 자유주의(중도파)	프랑스 민주운동(MD)
GREEN /EFA	녹색당/유럽자유연대(Group of the Greens/European Free Alliance)	환경정당/지역주의(좌파)	독일, 프랑스 등 각국의 녹색당(Green, Ecology...)
ECR	유럽보수개혁당(European Conservatives and Reformists)	보수주의, 경제적 자유주의, 유럽회의주의(우파)	영국 보수당, 폴란드 사법정의당
GUE /NGL	유럽통합좌파/북구녹색좌파 그룹(European United Left/Nordic Green Left)	사회주의, 공산주의(극좌파)	프랑스 공산당(PCF), 그리스 시리자(Syriza)
EFD	자유유럽-민주그룹(Europe of freedom and democracy Group)	유럽회의주의, 자국중심 보수주의(우파)	영국 독립당(UKIP), 이탈리아 북부연맹(LN)
NI	무소속, 정치그룹을 형성하지 않음	비정파 그룹(주로 극우파)	프랑스 국민전선(FN)
Others	유럽의회의 정치그룹에 소속되지 않은 정당출신	주로 신생정당, 향후 정치그룹을 형성하거나, 다른 그룹에 소속될 예정	

자료: European Parliament, 저자 정리.

2. 선거결과 분석

가. 국가별 선거결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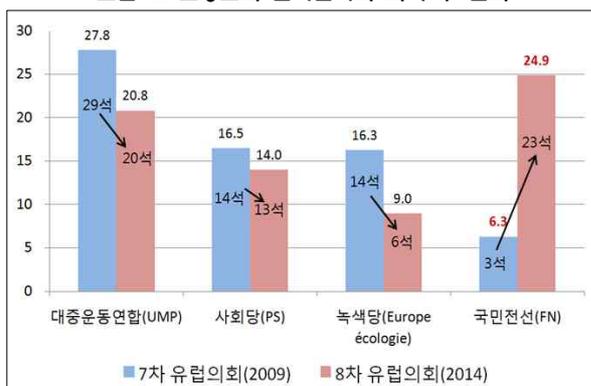
■ 프랑스와 영국에서는 기존 중도좌우파의 양당구조를 깨고 극우 또는 유럽회의주의 성향의 정당이 1위의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가장 많은 유럽의회 의원을 배출함.

- (프랑스) 극우정당인 국민전선(FN)이 24.9%의 지지율을 획득하면서 프랑스에 배정된 의석 수 74석 중 23석을 획득, 우파인 UMP(20.9%, 20석 획득)를 2위로 제치고 1위로 등극함(그림 5).
- 프랑스 정계는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FN의 득세를 ‘정치적 지진’, ‘프랑스 정치의 붕괴’로 표현하는 등 상당한 당혹감을 표출함.
- FN은 1972년 장마리 르펜(Jean-Marie Le Pen)에 의해 창설된 이후 반이민 정서, 자국민우선주의 등으로 극우정서를 대변하였으나, 정작 프랑스 국내선거에서는 그 입지가 좁아 국회의회에서 의원이 당선되는 경우도 적었음.

2) 유럽의회 내의 정치그룹은 문헌에 따라 정치그룹, 유럽정당, 원내교섭단체 등으로 표현되나 정확한 명칭은 유럽정치그룹(European Political Group)임. 본고에서는 용어상의 일관성을 위해 유럽정당(European Party)으로 지칭하며,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정당’은 유럽정당을 지칭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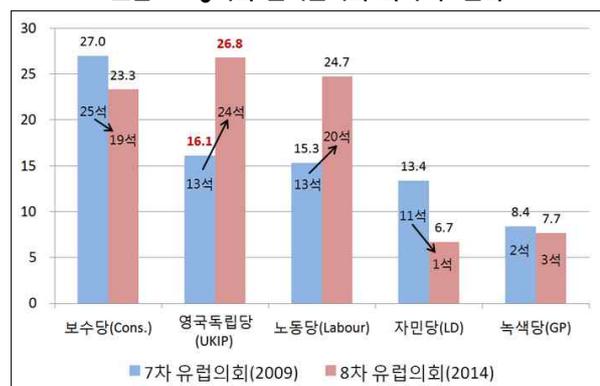
- 그러나 2대 당대표로 취임한 마린 르펜(Marine Le Pen)은 인종차별적 이미지를 중화시켜 온건화하는 데 성공하였으며, 2014년 3월의 지방선거에서는 11명의 지자체장을 배출하는 등 지지율을 높여왔음.
- 이번 선거결과는 이번이라기보다는 집권 사회당(PS)의 무능에 대한 여론의 악화로 인해 예견되었던 바이며, 집권 사회당은 급진좌파당과 연합에도 불구하고, 13.98%를 획득하여 13석을 획득하는 데 그치면서 제3당의 자리로 물러났음.
- (영국) 국회의석을 1석도 보유하지 못한 영국독립당(UKIP)은 10%포인트 이상 득표율 증가를 기록하면서 집권연정의 주축인 보수당을 제치고 1위를 차지, 영국에 부여된 의석 73석 중 24석을 차지함(그림 6).
- UKIP는 1993년 창당 이후 유럽통합과 EU의 역내이민에 대해 반대입장을 견지해 왔으며, 영국하원(House of Commons)에서는 단 1석도 보유하지 못하였으나, 2013년 5월 지방의회 선거에서는 147명을 선출시키는 데 성공하였으며, 유럽의회 선거에서도 계속적으로 득표율을 높여왔음.
- ※ UKIP의 연도별 유럽의회 선거득표율 변화(%), 의석 수): 1994년(1.0%, 0석) → 1999년(6.7%, 3석) → 2004년(16.1%, 12석) → 2009년(16.6%, 13석) → 2014년(27.5%, 24석)
- 전국단위 선거에서 보수당과 노동당이 아닌 제3의 정당이 1위에 오른 것은 1906년 이후 처음으로 집권당인 보수당은 이번 선거에서 노동당에 이어 제3당으로 밀려났음.
- UKIP가 크게 부상한 데에는 자국 선거와 달리 유럽의회 선거에서 반EU 성향의 정당에 호의적인 영국 유권자의 투표성향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집권 보수당의 캐머런(David Cameron) 총리도 반EU 정서를 표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수당의 입지가 좁아질 것으로 예상됨.

그림 5. 프랑스의 선거결과와 의석 수 변화



자료: European Parliament, <http://www.results-elections2014.eu>

그림 6. 영국의 선거결과와 의석 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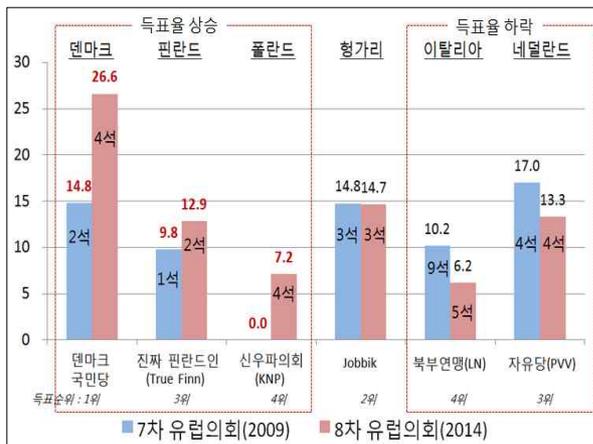
자료: European Parliament, <http://www.results-elections2014.eu>

■ 덴마크에서도 극우정당이 집권당을 제치고 1위 득표율을 기록하였으며, 핀란드와 독일의 극우 정당도 소수이기는 하나, 의석확보에 성공함.

- (덴마크) 덴마크 국민당(DF: Dansk Folkeparti)은 26.6%의 득표율을 획득(의석 수 4석)하면서 집권 사민당(19.1%, 3석)을 제치고 득표율 1위를 기록함.
- 덴마크 국민당(DF)은 1995년 창당 이후 이민 및 다문화주의 반대입장을 견지해 왔으며, 2007년 이후 국내총선에서 12~13%대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제3당의 입지를 굳혀왔음.
- DF는 2009년 유럽의회 선거에서는 14.8%의 2석을 확보한 바 있으나, 이번 선거를 통해 의석 수를 2배로 늘렸으며, 집권 사민당은 의석 수가 1석 감소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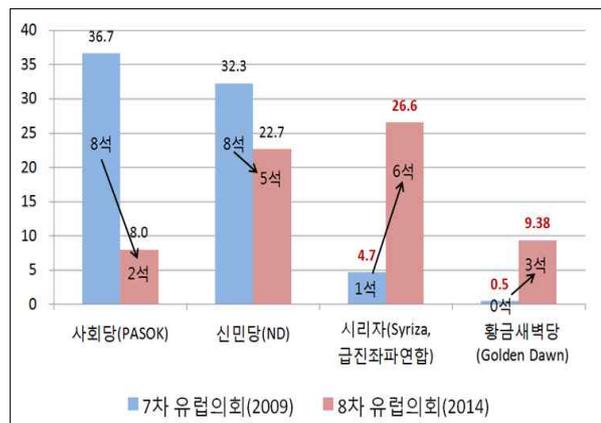
- (핀란드) 집권 보수당과 중도파가 각각 23.2%와 19.0%의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제1, 2당의 위치를 유지했으나, 민족주의/포퓰리스트 성향의 '진정한 핀란드인(True Finns)'도 12.3%의 득표에 성공하면서 의석수를 1석에서 2석으로 늘렸음.
- o True Finns은 2011년 4월 총선에서 19.1%를 득표, 제3당의 위치를 차지(200석 중 39석, 제1 야당)한 바 있으며, 그동안 부진을 면치 못했던 유럽의회 선거에서도 2009년 9.8%의 득표율을 기록, 최초로 유럽의회 진출(1석)에 성공한 바 있음.
- o True Finns은 2011년 총선 직전 포르투갈에 대한 유로존의 구제금융을 반대한 바 있으며, 그리스에 대한 추가 구제금융 조건으로 지원액의 20%에 해당하는 담보물을 요구한 바 있음.
- (독일) 집권 기민/기사당(CDU/CSU)과 사민당(SPD)이 1, 2위를 차지하는 가운데, SPD의 득표율이 7%포인트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유로화 유지에 반대하는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7.1%로 7석을 차지하였고, 극우파 독일국민당(NPD)도 1%의 득표율로 1석을 차지, 처음으로 유럽의회 진출에 성공함.
- o 메르켈(Angela Merkel) 총리의 CDU/CSU가 35.3%('09년: 30.7%), SPD가 27.3%('09년: 20.8%)의 득표율 기록하였고, 녹색당이 10.7%('09년: 12.1%)의 득표율로 3위를 차지하면서 전통적인 1~3위 구조를 유지하였음.
- o 그러나 유로존 위기극복을 위해 독일의 리더십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구제금융 반대와 유로화 포기를 주장하는 AfD의 약진은 메르켈 총리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음.
- o 또한 극우정당이 공공연하게 활동하기 어려운 독일 국내정치 여건에서 네오나치 정당으로 묘사되는 NPD가 유럽의회에 진출한 데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음.

그림 7. 극우·유럽회의주의 정당의 득표율 및 의석 수 변화



자료: European Parliament, <http://www.results-elections2014.eu>

그림 8. 그리스의 정당별 유럽의회 득표율 변화



자료: European Parliament, <http://www.results-elections2014.eu>

- 그리스에서는 긴축정책에 따른 피로감이 누적되면서 급진좌파가 1위의 득표율을 기록하였으며, 극우파 또한 3위의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극좌와 극우가 동시에 득세하는 현상이 발생함.
- EU의 긴축정책에 반대하는 급진좌파계열의 시리자(Syriza)는 26.6%의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1위를 차지, 그리스에 배정된 유럽의회 21석 중 6석을 얻었으며, 집권 신민당(ND)은 22.7%로 2위(의석 수 5 확보), 연정의 한 축인 사회당은 4위(8.0%, 2석)에 그쳤음(그림 8).
- o Syriza는 이미 2012년 12월의 총선에서 26.9%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2위당의 입지를 굳힌 바 있으며, 이번 선

거 직전에 실시('14년 5월)된 지방선거에서도 17.7%의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지난 지방선거('10년 11월) 대비 득표율을 12.7%포인트 끌어올린 바 있음.

- 급진좌파의 부상과 함께 네오나치 계열(극우)로 간주되는 '황금새벽당(Golden Dawn)'도 당 대표와 현직 국회의원 다수가 구속 중임에도 불구하고, 9.4%의 득표율로 3위를 차지하여 3석을 확보하였음.
- Golden Dawn은 2009년까지는 총선에서 득표율이 0.3%에 못 미칠 정도로 소수정당이었으나, 2012년 6월의 총선에서는 6.9%의 득표율로 18명의 국회의원(총 300명)을 배출하는 급성장을 기록하였으며, 이번 유럽의회 선거에서는 사상 최대의 득표율을 기록함.
- 그리스의 선거결과는 경제위기가 유권자들의 표심과 유럽통합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극명하게 보여주는데 사례로 중도성향 좌우파의 입지가 줄어들고, 정치성향의 양극화가 진행된 것임.
- 그리스에 배정된 21석 중 집권경험이 있는 중도우파(신민당)와 중도좌파(사회당)가 획득한 의석은 7석에 불과하며 긴축과 규제금융에 반대하는 극좌(Syriza+공산당)와 극우파가 획득한 의석수는 10석에 달함.
- 극좌파는 긴축과 규제금융에 반대하며 득표율을 올리는 데 성공했으며, 극우파는 반이민 정서를 부추기며 지지를 얻는 데 성공함.

나. 선거결과의 원인과 의미

- 이번 선거에서는 자국우선주의 중심의 극우파나 EU 주도의 긴축에 반대하는 극좌파가 크게 약진하는 양극화 현상이 특징인데, 극우와 극좌 모두 유럽회의주의를 표방하고 있음.
- 그동안 극우파의 득세현상은 일부 국가에 한정되었으나, 이번 선거에서는 프랑스, 영국과 같이 EU의 대형 회원국에서 극우파가 1당을 차지했다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큼.
- 1990년대 유럽 각국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극우정당은 소수정당에 불과하였으나, 저성장·고실업 문제를 이민자 및 사회통합 문제와 연계시켜 반이민정책을 주장하면서 성장하였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국우선주의 정서를 활용, 지지층을 넓혀왔음.
- 또한 유로존 위기 해결과정에서 강도 높은 긴축을 비롯, EU 공동체의 권한이 더욱 확대되자 자국의 정책주권 보호 및 고용보호를 주장하는 주권주의 입장을 대변하기 시작했음.³⁾
- 그동안 오스트리아, 네덜란드에서 극우정당이 연정을 통해 집권한 예는 있으나, 프랑스, 영국과 같은 EU의 핵심국가에서 집권 가능성이 거론되는 경우는 없었음.
- EU의 전반적인 경기부진과 긴축, 구조조정에 대한 피로, 실업률의 급상승은 반EU 정서를 확산시키면서 그리스의 경우와 같이 극좌파가 1위를 차지하는 현상이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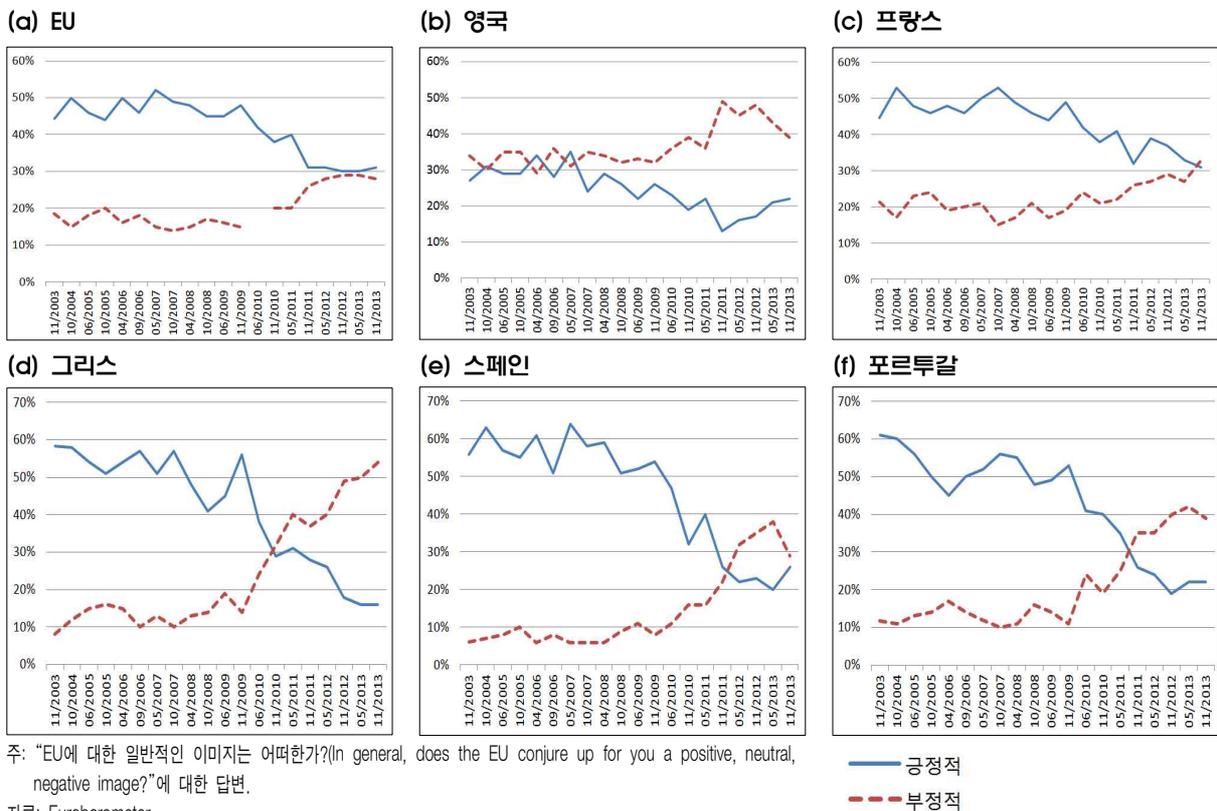
■ 이와 같은 유럽회의주의 정당의 득세는 EU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점차 확산되어 온 점과 범EU 차원에서

3) 유로존 위기에 대한 대응방안의 일환으로 도입된 재정협약(Fiscal Compact), 유럽학기제(European Semester), 거시경제안정을 위한 종합법안(일명 Six Pack), 유럽중앙은행(ECB) 주도의 은행동맹 구성 등은 EU 공동체의 권한을 확대하거나, 회원국 간 정책조율을 위해 개별국가의 재량적 정책주권을 제한하는 특징이 있음. 따라서 극우정당으로 대표되는 유럽회의주의 성향의 정당들은 이와 같은 EU/유로존 운영체계의 변화에 반감을 보이고 있음.

나타나고 있는 저성장 및 경기침체, 고실업 현상과 무관하지 않음.

- [그림 9]에 나타난 바와 같이 EU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a)에 EU에 대한 이미지는 전반적으로 악화되어 왔으며, 영국(b)과 프랑스(c)의 경우 부정적 이미지의 전반적인 증가세가 계속되어 왔음.
- EU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격히 악화되었으며, 현재 설문조사 시작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 주로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국가에서 하락의 폭이 큼.
- EU 통합의 심화에 부정적인 입장이 강한 영국의 경우 2000년대 중반 이후 부정적 이미지가 긍정적 이미지를 상회하여 왔으며, 프랑스에서도 최근 부정적 이미지가 긍정적 이미지를 상회하기 시작함.
- 구제금융을 겪은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의 경우에도 긍정적으로 답변한 수가 낮아진 반면, 부정적 답변의 비율은 크게 증가했는데, 특히 그리스의 경우 그 정도가 매우 두드러짐.

그림 9. EU에 대한 이미지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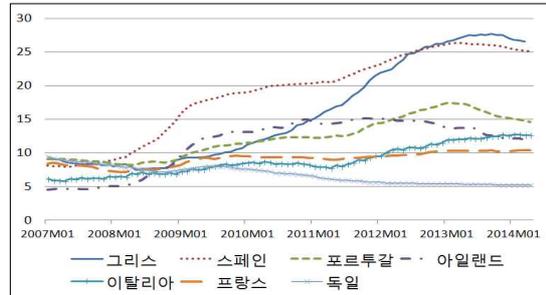
- 유로바로미터(Eurobarometer)의 설문조사(표 3)에 따르면, 현재 EU 회원국이 공동으로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실업과 경기침체(경제상황)인 것으로 나타나며, 특히 남부유럽의 경우 실업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장기간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고실업(그림 10 참고), EU의 권한확대와 범EU 차원의 긴축조치는 유럽회의주의 정서를 기반으로 극우와 극좌가 동시에 부상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해 주고 있음.

표 3. 설문조사에 따른 국가별 가장 중요한 이슈

국가	이슈			
영국	실업(35%)	이민(33%)	경제상황(23%)	물가(18%)
프랑스	실업(59%)	경제상황(37%)	범죄(16%)	물가(15%)
이탈리아	실업(56%)	경제상황(42%)	세금(27%)	물가(22%)
그리스	실업(65%)	경제상황(52%)	세금(20%)	공공부채(15%)
스페인	실업(74%)	경제상황(48%)	보건(11%)	물가(9%)
포르투갈	실업(71%)	경제상황(39%)	물가(22%)	세금(14%)
EU	실업(49%)	경제상황(33%)	물가(20%)	공공부채(14%)

주: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통해 4개 가장 중요한 이슈를 선정. 현재 본인이 속한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슈 두 가지는 무엇인가?(What do you think are the two most important issues facing at the moment?). 괄호 안은 응답자의 비중임. 2013년 11월 조사. 자료: Eurobarometer.

그림 10. 유럽 주요국의 실업률 변화



자료: 유럽통계청(Eurostat).

3. 후속이슈 및 향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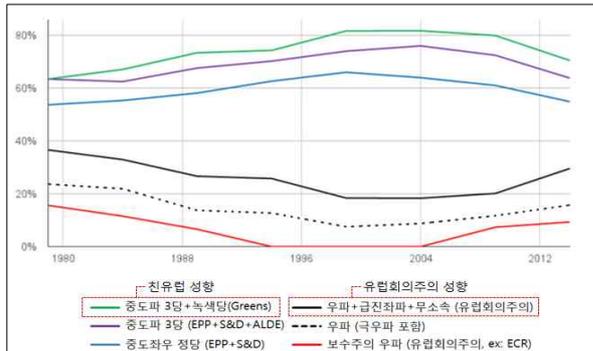
■ 여전히 중도성향의 정당들이 과반수를 크게 상회하는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럽회의주의 정당의 약진이 EU의 정책방향에 대변혁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음.

- EU의 정책영역 확대(유럽통합의 심화)에 회의적인 성향의 의원 수가 증가한 것이 사실이나, 여전히 70% 이상의 의원은 중도좌우파, 중도파, 녹색당 등 친유럽 성향의 정당소속임(그림 11 참고).
- 유럽의회 내 중도성향의 정당(EPP, S&D, ALDE)들은 합의나 연합 등을 통한 해결방식이 정착되어 있어 주요 안전에 대해 정치적 대립, 대결로 치닫는 경우가 국내정치에 비해 훨씬 적음.
- 따라서 과거와 마찬가지로 중도성향의 정당들이 합의를 통해 의정활동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음.
- 프랑스의 국민전선(FN)은 네덜란드의 자유당(PVV), 이탈리아의 북부연맹(LN)와 함께 유럽정당을 구성하고자 하였으나, 총 6개 국가의 정당이 연합하는 데 그쳐 독자적인 유럽정당을 구성하지는 못하였음.
- 유럽의회 내 정당구성(원내교섭단체)을 위해서는 최소 7개국, 25명 이상의 의원이 필요하며, 정당을 구성하지 못할 경우 의회 내 예산 및 인력지원, 상임위원회 내 의장 및 심의의원(rapporteur) 배분 등에 있어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음.
- 유럽정당을 구성하지 못한 국가별 극우정당들은 2014년 말까지 유럽정당의 구성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됨.
- [그림 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유럽회의주의 성향의 정당(GUE-NGL, EFD)들은 중도좌우 정당(EPP, S&D)에 비해 원내 표결 시 결속도(cohesion)⁴⁾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의석수에 비해 그 영향력이 의외로 작을 수도 있음을 시사함.

4) 결속도(Cohesion Index)는 각 개별의원들이 얼마나 당론에 입각하여 투표하는지를 의미하며 다음과 같은 수식을 통해 계산함. 결속도가 낮다는 것은 개별의원들의 표결이 양분되는 경우가 많음을 의미함. 자세한 내용은 Hix, Simon, Abdul Noury and Gerard Roland(2007), *Democratic politics in the European Parliament*, Cambridge, MA: Cambridge University Press, p. 215를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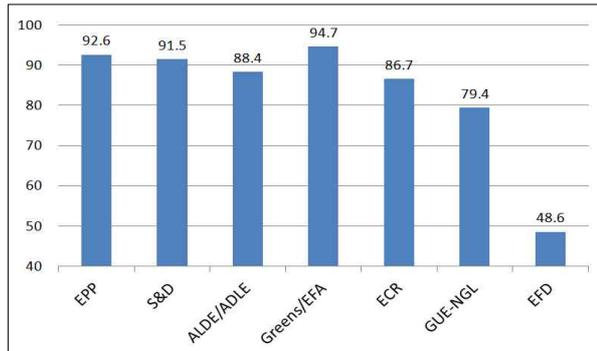
$$Cohesion_i = \frac{\max\{Y_i, N_i, A_i\} - 0.5[(Y_i + N_i + A_i) - \max\{Y_i, N_i, A_i\}]}{(Y_i + N_i + A_i)} \times 100$$

그림 11. 유럽의회 내 성향에 따른 의석비중 변화



주: 친유럽(EU 통합찬성)과 유럽회의주의 성향에 따라 정당을 구분함.
자료: Chart of the week: Political groups in the European Parliament since 1979, Bruegel.

그림 12. 유럽정당들의 표결 시 결속도 비교(2009~2014)



주: 결속도의 계산 방식은 (각주 4)를 참조할 것.
자료: Votewatch.eu.

■ 반면에 경우에 따라 결정투표자(casting voter)로서 레버리지를 확보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국내정치에도 이번 선거결과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유럽의회의 권한이 점차 강화되는 상황에서 20% 이상의 의원이 유럽회의주의 성향을 보인다는 점은 잠재적인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일부 침해한 법안의 경우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임.
- 유럽의회는 2013년 10월 EU-미국 간의 은행계좌정보공유협약(SWIFT Agreement)의 이행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찬성 280, 반대 254, 기권 30으로 통과시킨 바 있음.
- 이와 같이 근소한 차이로 표결이 결정되는 사안의 당론 정립에 성공할 경우 유럽회의주의 정당들은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을 것임.
- 그동안 유럽의회 선거가 집권당에 대한 중간평가로서의 역할을 해 왔다는 점에서 프랑스, 영국 등에서는 국내정치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회원국의 EU 관련 입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음.
- 프랑스의 올랑드(François Hollande) 대통령은 EU 축소론⁵⁾을 언급하였으며, 영국의 카메론 총리는 이번 선거 결과를 통해 변화를 수용해야 할 것임⁶⁾을 밝힌 바 있음.

■ 현재 EU 집행위원장에 룩셈부르크의 웅커 전 총리의 임명이 유력한 가운데, 임명과정에서 유럽의회의 영향력 강화가 확인될 것으로 전망됨.

- 리스본 조약은 EU 집행위원장을 선출하는 데 있어 유럽의회의 권한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 유럽이사회(EU 정상회의)는 EU 집행위원장을 제안하는 데 있어서 유럽의회 선거 결과를 반영해야 함(구체적인 반영방법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는 않음).⁷⁾

5) “이 선거결과는 더 이상 시민을 보호하지 않는 유럽에 대한 불신의 표시이며... (중략) EU는 단순, 명확해야 하며 필요하지 않은 영역에서는 물러나야 한다.” Francois Hollande TV 담화문 내용, Liberation(May 26th 2014), “François Hollande : «L’Europe, elle est devenue illisible, j’en suis conscient»”.

6) “이번 선거를 통해 나타난 견해에 주의를 기울여야하며 변화를 수용해야 한다.” David Cameron(May 26th 2014), Financial Times. “Cameron urges EU to drop ‘business as usual’”.

7) EU 집행위원장은 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가 기중다수결 방식(실질적으로는 만장일치)으로 1인을 추천하며 유럽의회의 신임을 통해 임명될 수 있음. 리스본 조약에 의해 추가된 점은 추천 단계에서부터 유럽의회 선거결과를 반영하여 후보를 선정해야 한다는 것임.

- 유럽이사회가 추천한 후보는 유럽의회 내에서 투표를 통해 결정됨.
- 유럽국민당(EPP)은 룩셈부르크의 용커(Jean-Claude Juncker) 전 총리를 EU 집행위원장 후보로 선출한 바 있으며, 6월 27일의 EU 정상회의에서는 용커 전 총리를 EU 집행위원장 후보로 선정하였음.
- 정상회의 표결에서는 독일, 프랑스 등 EU 26개국이 찬성하였으며, 용커 총리의 EU 통합주의 성향에 반대하는 영국은 헝가리와 함께 반대표를 던졌음.
- 새로 출범하는 유럽의회로부터 승인받을 경우 용커 전 총리는 11월부터 EU 집행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됨.

4. EU 경제정책에 대한 영향

- 유로존 위기 이후 EU는 재정과 금융을 비롯하여, 거시경제운영 전반에 걸친 개혁조치를 추진해왔으며,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정치적 합의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임.
- 2010년 그리스 재정위기로 촉발된 유로존 위기 이후 EU/유로존은 구제금융기금의 설립, 재정준칙의 강화, 은행동맹 추진 등 운영체제 개혁을 위한 광범위한 조치들을 도입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회원국 간의 갈등과 국내정치 불안, 이에 금융시장의 동요현상들이 나타난 바 있음.
- 독일과 프랑스는 구제금융의 방법과 재정준칙의 개혁, ECB의 역할 등을 둘러싸고 이견을 표출하였으며, 이 두 국가를 대표로 하여 북부유럽과 남부유럽의 견해차이가 부각되었음.
- 주요 이슈를 둘러싼 회원국 간의 이견은 사실상 국내여론을 반영하는 것으로 위기극복과정에서 자국중심적인 성향이 크게 나타난 바 있음.
- 현재 EU는 광범위한 분야에 걸친 정책개혁을 추진 중(글상자 2)이며,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는 회원국 간 정치적 합의와 함께 개혁에 대한 유럽의회의 지지가 필수적임.

글상자 2. 2014년 EU 집행위원회의 핵심추진 법안

- 은행동맹 및 금융규제
 - 단일정리기구(SRM: Single Resolution Mechanism)
 - 은행구제 및 정리(Bank Recovery and Resolution)
 - 금융상품시장 지침 II(MiFID II: Markets in Financial Instruments Directive II)
 - 지불계좌 지침(Payment Accounts Directive)
 - 결제시스템 관련 통합법안(Payments package: Directive on Payment Services+ Regulation on Multilateral Interchange Fees)
 - EC 파산규정 개정(Amendments to the EC Insolvency Regulation)
- 자동차 CO2 배출 규제
- 근로자배치에 관한 지침(Posting of Workers Directive)
- 모바일 로밍 관련 규제(Connected Continent proposals)
- 담배상품 지침(Tobacco Product Directive)
- 탄소배출권시스템 향후이행(Back-loading of the EU's Emissions Trading System)
- 제4차 철도 패키지(Fourth Railway Package: EU 회원국 철도의 상호운영성 개선을 위한 제안)
- 공공조달 개혁 패키지(Public Procurement reform Package)

■ 유럽회의주의 정당이 약진함에 따라 유로존 위기해결을 위해 도입 중인 주요정책들의 추진동력이 다소 약화될 가능성이 있음.

- (은행동맹) 유럽통합의 심화와 상당한 수준의 예산투입을 전제로 하고 있어 유럽회의주의 성향 의원들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애로를 겪을 것으로 예상되며, 중도좌우파 정당의 합의부재 시 추진동력이 약해질 가능성이 있음.
- 총 3단계에 걸쳐 추진되는 은행동맹은 단일감독기구(SSM, 1단계)의 출범('14년 1월) 이후 중장기적으로 단일정리기구(SRM, 2단계) 및 단일예금기구(3단계)의 설립이 예정되어 있음(그림 13).

※ SSM: Single Supervisory Mechanism, SRM: Single Resolution Mechanis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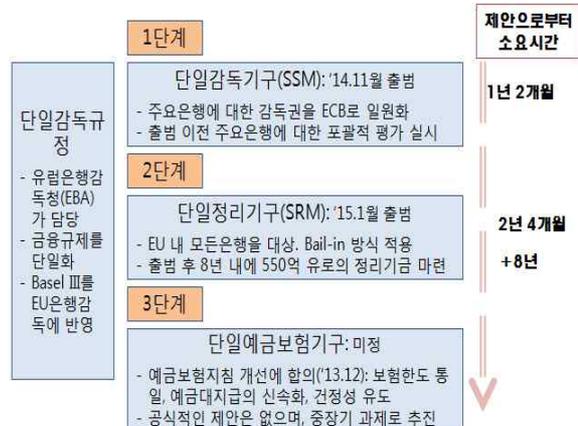
- 추진과정에서 EU 공동체 및 회원국 차원에서 상당한 수준의 법적적 준비가 요구되며, 2단계 작업(SRM 설립)부터는 재원의 공동화 또는 공동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회원국 간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음.
- 유럽회의주의 성향의 국가별 정당들이 유로화 유지에 회의적 입장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은행동맹 추진을 지지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으며,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도좌우파 간의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의외의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음.

표 4. 은행동맹 추진 과정

주요 회의	합의 내용
EU 정상회의('12.6)	은행동맹 추진에 합의
EU 집행위원회('12.9)	단일감독기구(SSM) 설립에 관한 초안 발표
EU 정상회의 ('12.12)	은행동맹 추진 로드맵에 합의
유로존 재무장관회의('13.6)	- ESM을 통한 구제금융의 상한선(600억 유로) 설정 - Bail-in 방식 채택 - 예금액 10만 유로까지 보장
EU 정상회의('13.6)	2014년까지 은행동맹 추진을 위한 핵심제도 구축
EU 재무장관회의('13.12)	부실은행에 대한 단일정리기구(SRM) 설립에 합의
EU 이사회, 유럽의회('14.3)	SRM 설립을 위한 지침 초안에 합의

자료: 저자 정리.

그림 13. 은행동맹의 구성요소 및 역할



- (금융거래세) 유럽의회의 중도좌우파가 대체로 수용하고 있으며, 녹색당을 비롯, 그 외의 좌파성향 정당들이 지지하고 있으나, 동 조치가 EU 공동체에 대한 과세권 부여조치의 일환으로 간주될 경우 주요 회원국 및 유럽회의주의 성향 의원들의 반대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음.

○ 구체적인 계획과 시행일정이 이미 확정되었고 유럽의회 내 전반적인 지지도가 높아 원안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보다 강화될 가능성도 존재함.

○ 반면에 동 조치가 EU 공동체 차원의 과세권 확보 논의로 발전할 경우 유럽회의주의 성향의 의원들이 반대할 것으로 예상되어 찬반 양측의 힘이 혼재할 것으로 예상됨.

- (역내 노동이동) 이민자유화 정책이 후퇴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유럽단일시장의 한 축인 노동이동성 강화 움직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 현재 EU 회원국 간 실업률 및 경기격차가 확대된 상황에서 역내 노동이동의 활성화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매우 중요한 정책방향임.

- 그러나 이번 선거를 통해 약진한 극우정당들이 대부분 자국민 고용중심, 이민반대성향을 띠고 있다는 점, 일부 서유럽 국가가 역내이민을 제한하는 조치들을 계획 중이라는 점에서 역내 노동이동 활성화 정책이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있음.
 - ※ 영국정부는 자국민과 같은 복지혜택을 보장받는 동유럽 이주민의 신규유입 억제방안으로 이주 3개월 안에는 실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제를 마련
 - (미-EU FTA, TTIP)⁸⁾ 통상정책에 관한 유럽의회의 권한이 대폭 강화된 점을 감안할 때 유럽의회의 성향이 통상정책에 반영될 소지가 높으며, TTIP 협상이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있음.
 - 리스본 조약은 EU의 무역협정(예: FTA) 협상 시 유럽의회에 대한 주기적인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유럽의회에 무역협정에 대한 동의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는 무역협상이 유럽의회의 성향에 의해 좌우될 수 있음을 의미함.
 - 유럽의회는 TTIP 추진에 대해 압도적 다수로 찬성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동 무역협정이 많은 민감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럽의회의 요구로 인해 협상이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음.
 - ※ 유럽의회는 TTIP 추진에 대한 찬성결의문을 채택(2012.10.23): 찬성 526명(84%), 반대 94명(15%), 기권 7명(1%). 유럽회의주의 성향의 우파정당(ECR+EFD)들은 기권표를 제외한 출석의원 전원이 찬성하였으나, 좌파성향의 정당(녹색당 + GUE-NGL)들은 기권표 없이 출석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음.
 - ※ 유럽의회는 TTIP를 통한 무역자유화 자체보다는 식품안전(예: GMO) 및 환경·소비자보호, 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슈에 더 민감한 반응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 유럽의회로 인해 협상이 지연된다면, 이는 유럽의회의 성향변화보다는 유럽의회의 권한강화에 기인하는 측면이 클 것으로 예상됨.
- 2010~12년의 유로존 위기 이후 EU는 통합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해온 바, EU에 대한 지지도 약화는 개혁의 지속적인 추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계속 관찰할 필요가 있음.

8) TTIP: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 문헌에 따라 미-EU FTA로 표기.

부록

표 5. 유럽의회 내의 정치그룹(유럽정당) 및 주요 이슈에 대한 입장

로고	명칭	성격	주요 이슈
	유럽국민당 (E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독교 민주주의 보수주의 친EU 성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준칙과 균형재정에 입각한 재정정책 선호 EU의 역할은 사안의 중요성과 성격에 따라 확대되거나 축소되어야 함. 미국과의 FTA 찬성 역내 노동이동에 찬성하나, 복지혜택의 제공은 실제로 해당 국가에서 일한 경우에만 지급되어야 함.
	유럽사회당(S&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주의 사민주의 친EU 성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투기에 대한 제약강화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간 적절한 분리가 필요 은행임원의 보너스 제한 및 금융거래세 도입 옹호 EU 차원의 독자적인 신용평가사 설립을 주장 EU 차원에서 적절한 수준의 최소임금을 지정할 것 성장촉진을 위해 EU 또는 EU기관이 참여한 프로젝트 채권 발행을 주장
	유럽자유민주연대 (ALD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유주의 친EU 성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국과의 FTA에 찬성. 탄소거래제도의 활성화 국가 간 조세경쟁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 세금징수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해서는 국제차원의 공조가 필요
	유럽녹색당 (Gree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주의 친EU 성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CO² 감소와 원자력 및 석탄사용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 EU 차원의 에너지 정책수립이 필요 위험부담이 있는 금융상품을 금지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을 분리할 것 강한 은행동맹을 설립 범EU 차원의 최소 법인세율 및 부유세율을 지정할 것 금융거래세 도입과 은행비밀유지법을 폐지를 주장
	유럽보수개혁연대 (ECR)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수주의/ EU에 비교적 회의주의적 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ECR을 정당들의 연합(유럽정당)이 아닌 연대로 정체성을 규정 범유럽적 공약을 채택하고 있지는 않으며, 각각의 국별 정당들이 고유의 선거 공약을 갖고 있음.
	유럽통합좌파당 (GUE-NGL)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주의 공산주의 EU에 비교적 호의적인 입장(좌파적 시각 견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정위기 해결을 위해 유럽차원의 연대를 강조 탄소배출 억제에 대해 시장메커니즘(예: ETS)을 활용하는 것에는 반대 천연자원의 사유화에 반대하고 에너지의 공동생산 및 분배를 주장 미국과의 FTA에 반대 EU와 유럽통합에 비교적 호의적이거나, 신자유주의, 무역개방, 민영화 등에 기반을 둔 단일시장계획에는 회의적 입장
	유럽자유민주운동 (EF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파민주주의 자국중심 보수주의 EU에 회의적인 입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EU는 주권국가들 간의 협력체가 되어야 하며, 협력방식은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해야 함. 중앙집권화 된 형태의 초국가적 유럽에 반대 조약과 공동정책에 기반을 둔 추가적인 유럽통합 심화에 반대 조약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경우 회원국의 국민투표가 선행되어야 함.
	유럽자유연대 (EFA)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주의 EU에 비교적 호의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들의 자치권을 인정하는 EU를 구축하고자 함. EU 차원의 독자적인 신용평가사 설립을 주장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직 소속이 없는 상황 EU 회의주의 성향의 정당 	표 6을 참조

자료: CIO View Special European Elections 2014(May 2014), "Deutsche Asset & Wealth Management"에 기반을 둔 정리.

표 6. 유럽회의주의 성향의 국가별 정당과 주요 이슈에 대한 입장

정당/국가	지지율 조사 ¹⁾	주요 이슈		
		유로화	EU	유럽 국가/이주
국민전선 (Front National) /프랑스	22.5% (Ifo/meta polls, net, 4월 28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은행의 자주권을 확보하고 화폐의 평가절하를 위해 유로존의 해체를 요구 유로화를 보호하기 위해 국내문제를 희생하는 것에 반대(예: 고실업, 긴축) 금융투기 방지를 위한 규제 외국자본에 특별세 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별 국가들의 자주권 확보를 위해 EU 조약(European Treaties)을 재검토할 것 EU의 현행 정책결정구조를 전면 재검토하고, EU 집행위원회의 권한을 축소할 것 EU 예산을 위해 분담금 지급을 반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별 국가로 구성된 분권화된 유럽 추구 불법이주자 추방 다문화주의 반대 센겐협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
독일을 위한 대안(AfD: Alternative für Deutschland) /독일	6% (Infratest dimap /ARD, 4월 3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음과 같이 유로존을 개혁할 것을 주장 <o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로존 탈퇴권한을 회원국에게 부여할 것. 주요국들이 과거 ERM2와 유사한 새로운 환율제도를 구축할 것. 두 가지 주장이 모두 관철되지 않을 경우 독일은 유로존을 탈퇴해야 함. 유로존 회원국 채무에 대한 구제금융 금지 구제금융기금(ESM) 및 무제한 국채매입(OMT) 폐지 출자비중에 따라 유럽중앙은행(ECB) 의결권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체적으로 EU에 대해서는 지지 TTP가 EU에 부담이 될 경우에는 동 무역협정에 반대 은행정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채무에 대한 공동책임화하는 것에는 반대 은행의 부채비율을 25%로 제한 EU의 정책권한을 재검토하여 가능하다면 분권화할 것 공동농업정책 예산을 점진적으로 감축하여 2024년까지 완전히 폐지할 것 국가파산제 도입 순기여국(EU 예산)에 대해서는 EU의 정책결정 시 거부권을 부여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조성 원칙(EU의 최소주의 개입)을 엄격하게 고수 구제금융과 관련하여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 이민자에게 독일복지혜택을 부여하는 것에 반대
약진 이탈리아 (Forza Italia) /이탈리아	19% (Piepoli, metapolls .net, 4월 1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럽의회 선거와 관련된 공약은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럽의회 선거와 관련된 공약은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럽의회 선거와 관련된 공약은 없음.
오성운동 (Movimento 5 Stelle) /이탈리아	24.5% (Piepoli, metapolls .net, 4월 1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로화 사용을 지속할 것인지에 대한 국민투표 주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재정협약과 이에 따른 긴축에 반대 유로본드의 도입 주장 정치 공동체를 목적으로 한 지중해 국가들 간의 연합형성 혁신과 새로운 생산 활동에 대한 투자 시에는 재정적자 3% 원칙에서 제외할 것 	
독립당(UKIP) /영국	31% (YouGov/Sunday Times, 4월 27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순조로운(amical) EU 탈퇴 EU 탈퇴 후 영국-EU 간 FTA 체결 EU가 정치공동체로 발전하는 것에 반대 영국에 부과되는 EU의 각종 규제로부터 탈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경 통제 재도입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고용 잠식을 방지하고 의료시스템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주법을 다시 재정할 것

주: 지지율은 유럽의회 선거 실시(5월 22-25일) 직전 설문조사에 의한 것으로 실제 득표율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있었음에 유의할 것.
자료: CIO View Special European Elections 2014(May 2014), "Deutsche Asset & Wealth Management"에 기반을 둔 정리.